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체제 변화의 장기 전망

이 수 석(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차 례

- I. 머리말
- II. 김정은 후계구도 현황
- III. 북한체제 변화 가능성
- IV. 북한체제 전망
- V. 맺음말

I. 머리말

198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내부는 사상적으로 단결되어 있었고, 사회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1990년대 이르러 참혹한 경제난으로 북한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 북한에서 등장한 선군정치는 북한의 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 선군정치는 군대를 중시하는 통치체제로서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를 군사체제화 하여 군사문화에 젖어들게 하였다. 지금 북한은 군을 앞장세우지 않고는 정치사회 전반을 운영하기가 힘들다. 북한주민들의 의식변화로 인해 북한 지도부의 각종 정책에 대해 냉소적인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다는 반증이다.

올해 초부터 거세진 중동의 민주화 혁명 바람으로 이집트의 독재자 무바라크가 축출되었고, 예멘, 리비아에까지 영향을 미치자 북한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북.중 접경도시인 신의주에서는 2월 중순 주민 수

백명과 북한당국이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북한은 최근 60년만의 흑한과 구제역, 홍수 등으로 군대에서 조차 심각한 식량 부족 사태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식량난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3대세습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5월과 8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하여 대북경제지원과 3대 세습에 대한 보장을 받으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제시한 '2012년 강성대국 문턱도달'이라는 구호는 현재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가 되었다. 김정은 후계자가 등장해서 어떤 정책을 전개하더라도 북한경제가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로 갈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주민들은 곤궁한 생활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점에서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체제를 전망하는 것은 향후 남북관계와 통일을 생각할 때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이 글은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체제를 장기적으로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김정은 후계구도 현황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과 후계구도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초미의 관심사이다.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김정일이 살아 있는 한, 통치 능력과 권력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1990년대 중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공식적인 지도자가 된 이후에 후계자 문제에 별 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다. 2008년 여름부터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이 발생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김정일이 북한을 제대로 통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들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또한 2002년 북한에서 한때 수면위로 나타났던 후계관련 표현들이 2008년부터 다시 등장하면서 북한 내에서 후계관련 움직임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추측되었다.¹⁾ 김정일의 건강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후계문제가 빨리 대두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작년에 북한이 전 세계에 뉴스거리를 제공한 것은 9월말 44년 만에 개최된 3차 당대표자회이다. 당대표자회 직전에 김정일 위원장의 3남 김정은은 고모인 김경희와 함께 인민군대장 칭호를 받았고, 당대표자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직책을 부여 받았다. 3차 당대표자회를 보면,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인적개편이 이루어졌다. 124명을 선출한 당 중앙위원을 시작으로 김정일 위원장이 혼자 있던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5명으로 보완했고, 17명의 정치국 위원과 15명의 후보위원을 충원했다. 정치국과 더불어 노동당의 양대 기구인 비서국 비서와 전문 부서장들의 인사도 단행했다. 당대표자회 직후에 처음으로 후계자 김정은의 사진과 동영상까지 공개하였다.

김정은으로의 후계구축은 과거 1960년대 김정일의 후계구축과정과 비교하면 그 속도가 파격적으로 빠르다. 김정일은 10여년에 걸친 준비과정을 통해 후계자에 내정되었고, 또 다른 10여년이 지난 이후에야 북한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반면에 김정은은 2~3년 안에 김정일이 가졌던 모든 권력을 물려받으려 한다. 김정은으로의 후계구축을 급속히 진행하는 것은 그만큼 북한체제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의미이다.

가장 눈에 띄는 조직은 김정은이 새롭게 부위원장을 맡은 중앙군사위원회다. 그동안 당 군사위원회는 유명무실했지만 김정은이 부위원장이 됨으로써 국방위원회에 버금가는 권력기구가 되었다. 당초 예상과 달리 김정은이 정치국과 비서국에 진입하지 않은 것은, 실무개입이 필요한 당직을 맡으면 권한과 함께 책임도 같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이다. 일단은 김정은이 당 지배권을 확립할 때까지 그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미이다. 김정일의 건강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집중과 선택'의 전략에 따라 당중앙군사위원회를 먼저 장악하는 것이 후계구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는 견해도 있다. 이를 통해 군부를 확실하게 통제한 후 당중앙위원회의 장악에 순차적으로 나서는 것이 권력의 안정적 승계에 유리하다

1) "존경하는 어머니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충신중의 충신이다", 조선인민군 강연 자료(조선인민군 출판사, 2002. 8).

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²⁾

또한 군경력을 포함한 당의 경력이 부족한 김정은이 선군정치를 지휘할 강인한 지도자라는 인상을 주민들에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고, 군을 확실하게 통솔하기 위해 군의 직위가 필요했다고 보여진다. 후에 김정은이 갖고 있는 최고사령관의 직위를 계승하려면 인민군 계급과 당 군사위원회에서의 지위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직책이다. 조명록 국방위 제1부위원장의 사망이후 공석이된 제1부위원장 자리는 김정은이 대행할 것이다. 2012년 상반기에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서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에 임명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김정일 매제 장성택의 권력도 강화되었다고 보여진다. 장성택은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승진됐고 이번 당대표자회를 통해 정치국 후보위원, 당행정부장, 당중앙군사위 위원에 임명됨으로써 북한의 모든 권력기관을 직간접적으로 장악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습후계자의 측근들인 이영호 총참모장, 최룡해 당비서, 김경욱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문경덕 평양시당 책임비서 등을 정치국과 비서국에 전면배치했다. 이들은 정치국과 비서국에서 김정은 승계를 위해 세대교체의 선봉장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3차 당대표자회를 앞두고 김정은은 5월에 이어 3개월 만인 8월 말에 다시 중국을 방문해서 3대세습을 용인받고자 했다. 당대표자회의 직후 후진타오 주석은 최태복 북한 노동당 비서가 이끄는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중국 공산당은 북한의 새 지도부와 국제·지역적인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과 협력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3대세습에 대해 중국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최소한 북한체제의 안정에는 무엇보다 중국의 지지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북한은 중국의 반응에 안심했을 것이다. 중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 올해

2) 정성장, "북한 노동당 제3차 대표자회와 김정은 후계체계 구축", 세종논평 No. 196 (2010. 9. 30).

방중을 포함해 1년에 세 차례나 중국을 방문했다는 것은 3대세습의 향방에 대해 김정일 스스로도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III. 북한체제 변화 가능성

중동민주화 혁명을 보면, 인터넷, 휴대폰,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가 대세인 시대를 실감케 한다. 중동의 민주화 혁명은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무엇보다 지도자의 장기집권에 따른 부패, 심각한 경제난과 빈부격차 등은 대중들의 불만을 증폭시켰으며, 주민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중동민주화 혁명은 민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제 아무리 철옹성 같던 정권도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모래성처럼 무너진다는 정치의 기본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다. 튀니지와 이집트, 리비아에 이어 예멘, 시리아, 심지어 안정적 정권이라고 평가받아온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시위가 발생한 점은 이 지역의 대중들이 민주주의와 삶의 질 향상을 얼마나 갈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동지역의 민주화가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되어 소위 제4의 민주화 물결을 이룰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러나 구조적, 환경적 요인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튀니지에서 발생한 청년의 분신과 같은 돌발적인 계기가 주어진다면, 기존의 독재정권에 대한 대중저항으로 얼마든지 이어질 수 있다.

모든 독재국가들이 재스민 혁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중동 민주화 시위의 파고가 북한으로 넘어올 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북한도 부패와 세습체제의 중동국가와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다. 지도자의 고령화와 장기집권, 권력세습, 부패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이 민주화 시위를 했듯이, 북한 역시도 비슷한 환경에 처해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북한권력층 내부의 의사결정에 혼선이 있으며, 대남정책에서도 합리적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추측도 있다.

세습후계자는 아버지처럼 카리스마를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여 국정외 혼란을 초래한다. 중동지역에서의 집권층이 국가를 통치할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북한의 3대세습 체제도 마찬가지이다. 김정일이 후계체제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 유고 상태에 처한다면 3대세습 구축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북한처럼 모든 반대파를 철저하게 숙청한 국가에서는 대중저항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북한지역의 휴대폰 가입자 수가 이미 50만명을 넘어섰고,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휴대폰이 보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동민주화 소식이 북한주민들에게 이미 알려졌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주민들도 중동국가의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 찾으려고 했던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점으로 인해 중동발 민주화 시위가 향후 북한에서의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고취시킨다면 북한에서도 머지않아 민주화를 요구하는 피플 파워가 폭발하지 않을 까하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불확실하지만 김정일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중동에서처럼 대규모 시위는 불가능하다.

북한은 3대세습을 통해 정치체제가 안정되기를 바라지만, 김정일 이후 북한체제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체제의 전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변화를 야기시키는 변수를 파악해야 한다. 제일 큰 변수는 김정일의 건강이상과 후계구도이다. 김정일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면 북한권력층 내부의 의사결정에 혼란이 초래되어 체제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북한체제의 특성상 김정일이 중태에 빠지더라도 생존해 있는 한, 북한의 수령체제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³⁾ 김정일이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3대세습으로 후계구도가 안착되면 북한은 현재의 수령 유일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3) 현성일, "북한의 권력구조변화 가능성과 한반도 평화"(평화문제연구소 학술회의, 2008), pp. 19-20.

둘째, 국제사회와의 관계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도발적 행동을 계속한다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북한의 경제난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로 인해 북한의 체제내구력이 과거보다 더 저하되면서 주민들의 탈북사태도 증가일로에 처하게 된다. 현재와 같은 북·중 우호관계의 지속 및 미·북관계 정상화 여부도 북한체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의 대북지원은 북한체제의 버팀목이다. 중국의 대북정책의 변화여부에 따라 북한체제의 변화가 예상된다.

셋째, 엘리트층과 주민들의 의식구조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북한주민의 체제에 대한 충성심은 놀라울 정도로 강하다. 특히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도 김정일에 대한 충성의 분위기와 행동들은 여전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경제난을 향후 몇 년간 겪으면서도 북한 주민들이 당과 지도부에 대해 충성심을 유지할 지는 의문이다. 2009년 화폐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주민들은 과거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켜 주기는 커녕, 갖고 있는 재산을 강탈한 정부로 간주, 당과 지도부에 대해 적개심이 만연되어 있는 형편이다.

넷째, 북한지도부내 역학관계이다. 특히 군부내 상호관계가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김정일체제에 충성을 다하고 있고, 김정은 후계체제에서도 자신의 권익이 보장된다면 별다른 동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군부내 상호 견제하는 세력들이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나선다면 분열로 갈 것이고 이는 북한체제의 변화의 계기가 된다.

IV. 북한체제 전망

1. 권력투쟁을 통한 집권세력의 변천

김정은 3대세습 체제가 향후 10년간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가 큰 관심사이다. 비록 포스트 김정일체제에서 김정은이 계속 집권한다고 할

지라도 그 성격에는 많은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 가지 집권세력의 유형을 가정해볼 수 있다.

첫째는 3대세습 체제내 권력변동이다. 김정은의 권력구축과정에서 김정일 와병 이후 중요한 역할을 한 장성택의 후견체제가 성립되는 상황이다. 장성택은 한때 실각했지만 2006년부터 북한권력층에서 김정일 다음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정일을 대신하여 북한내부의 기강을 바로잡고 북한의 주요 정책결정을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있다면, 김정은 체제에서도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둘째, 군부를 포함한 집단지도체제의 등장도 생각해볼 수 있다. 김정일 시대 정치이데올로기이자 사회통제 방식인 선군정치로 그 역할이 강화된 군이 전면에 등장하여 포스트 김정일시대 북한정국을 수습하는 상황이다. 군이 물리력을 사용하여 정권을 장악하는 것이 군부쿠데타인데, 이중삼중으로 감시하는 북한체제에서 군부쿠데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김정일 이후 군을 비롯해 당과 정부의 집단지도체제 형태의 등장이 가능하다. 세습후계자 김정은을 상징적 지도자로 놓고 당·정·군의 고위 간부들이 집단지도체제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수령유일 체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북한에서 집단지도체제는 힘들다. 집단지도체제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군부나 당의 실력자에 의한 타 세력제압을 통한 1인 지배자의 등장이다. 당·정·군의 엘리트들이 포스트 김정일시대 초기에는 상호 협력을 할 것이다. 그러나 권력은 집단지도체제보다는 한 사람의 유력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많다. 특정집단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 결국은 북한의 권력을 장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등장이후 권력과정에서 북한체제는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상황 중 어느 특정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확실한 것은 세 가지 집권세력의 변천을 통해서도 아래와 같은 개혁지향의 권력구조와 개방 및 통일지향의 체제전환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2. 개혁지향의 권력구조 변화

김정일이 존재하고 있는 한, 북한에서의 정치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권력구도에서 김정일의 목인 하에 김정은 후계자 중심으로 권력이동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위원장은 김정은이 국정에 상당히 관여하는 것을 용인할 것이다. 단기적 측면에서 볼 때, 북한 체제는 김정일의 권력에 별 다른 이상이 없고 현재의 북한체제가 그대로 현상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이 추구하는 세습체제가 제대로 구축되고, 북·미관계도 개선되어 체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후계구도가 김정일의 후견 하에 안착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김정은 세습체제는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개혁·개방 정책을 전면적이지는 않더라도 부분적으로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지금의 수령유일 지도체제를 김정은 세습체제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 북한은 사회주의의 기본틀을 유지하고 주민들에 대한 억압통제정책을 유지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경제발전,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대외원조 획득을 추구하려 할 것이다.

김정은 후계체제는 10년 후인 2020년 이후에 이르러서도 현재와 같은 수령유일체제를 유지할 것인지에는 의문이 많다.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 체제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현재의 당국가체제에 기초하여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경제적으로 일부 개혁·개방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수도 있지만, 기존체제를 유지하기 보다는 체제의 성격이 일부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당국가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도 현재 노동당과는 다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정치단위체들이 작동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김정일의 생존여부이다. 김정일이 2020년 이후에도 생존해 있다면 북한체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나, 2020년 이후 포스트 김정일시대가 되면, 북한의 수령유일체제는 지속하기가 힘들다. 또

한 2020년 이후에는 북한의 엘리트층이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국제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체제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자각하여 북한의 체제전환을 모색하는 시기로 예상된다.

체제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의 변화이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실천이데올로기들이 많이 등장했다. 주체사상이나, 1990년대 등장한 붉은기 사상, 선군사상은 사회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실천이데올로기이다. 그런데 2020년 이후에도 이런 실천이데올로기가 등장하여 사회주의 북한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주체사상의 골격은 유지될지 모르나, 많은 내용들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선군사상은 확실히 폐기되고 실리사회주의 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대체되는 이데올로기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고, 평화와 경제발전 지향의 이데올로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즉, 선군노선이 아닌 평화노선과 경제개발을 위한 새로운 담론 제시가 기대된다.

북한체제는 권력관계에서 큰 변화가 발생하면서 개혁적인 성격의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첫째, 정치권력 기구의 제도화이다. 그동안 노동당은 북한정치의 중심이자 북한체제를 통치하는 근간이었다. 이런 기존의 노동당 중심의 정치체제에서 변화가 발생하여 당이 과거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북한의 행정, 사법, 군대, 주민 생활을 통제할 수는 없다. 당의 역할이 매우 약화된다는 것은 당을 대신해서 다른 기구들의 권한이 강화된다는 의미로서 당 대신에 헌법에 규정한 기구들의 역할과 기능들이 정상화될 것이다. 이 점은 2009년 개정된 북한 헌법에서 잘 나타난다. 예컨대 기업소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권한강화에 대해 굳이 규정하지 않아도 될 사안인데 명문화한 것은 김정일 이후의 통치형태는 법제도에 기반하여 점차 제도화될 가능성을 대비한 것이다.

특히 당·정 관계에서 당보다는 정부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다. 즉, 북한 체제를 실제로 운영하는 주체가 내각으로서 변모하면서 내각 총리의

권한이 강화된다. 북한에서 내각 총리는 희생양 자리로서, 경제난을 비롯한 책임을 지는 사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물러나는 자리였다. 2020년 이후 북한의 통치자들은 불필요한 권력기관의 간섭과 남용을 막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상적 투쟁방식의 통치를 지양하고, 경제와 행정분야는 관련 전문가에게 맡기게 될 것이다. 특히 자력갱생 대신 해외 시장과의 교류를 통해 경제발전을 추구하며, 이념관료들보다는 전문관료들에게 국가의 행정분야를 대폭 이양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북한지도자 선발 방식에서의 화이다. 김정은 세습체제에서도 북한지도부가 지금과 같은 초법적인 수령유일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주민들의 경제난 해결을 위해 북한지도부 내에서 유화적·개혁적 정책을 추진할 인물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많다. 이때 수령의 유일독재체제는 집단지도체제로 변모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헌법 개정도 이루어질 것이다. 2009년에 이어 2020년 이후에 김정일 헌법이 아닌, 포스트 김정일시대에 맞는 헌법이 개정될 것이다.

또한 북한에서 최고지도자는 내각 총리가 될 가능성도 예상해볼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이 내각 총리를 선출하는 방식을 통해 북한체제를 대표하는 최고직책으로 내각 총리가 부상할 수 있다. 대의원들은 지금과 같이 당에서 일방적으로 추천한 인물이 아닌 각 지역·직능별로 직접 또는 비례대표 방식으로 북한주민이 선거하는 방식으로 선출될 것이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이 직접 내각 총리를 선출하게 되면 내각 총리는 최고인민회의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될 수 있다.

셋째, 군관련 기구의 대폭 정비이다. 당의 역할 약화는 당의 군대였던 북한인민군 체계에도 영향을 미쳐 과거와 다른 방향으로 개편될 것이다. 북한의 군대는 그동안 김정일의 군대, 노동당의 군대였다. 2020년 이후 북한군은 당의 지시를 받고 수령우상화에 앞장서는 종속적 위치에서 벗어나 군 본연의 독자적 영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군 총정치국의 역할이 약화되면서, 인민무력부 중심으로 군대 기능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 개방과 통일지향의 체제 전환

지금부터 10년 후 북한체제는 대외개방을 통해 과거와 다른 정상국가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체제가 별 다른 저항없이 안착되더라도 약 10년 후에는 개혁·개방 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교분야에서 북한체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따르려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을 비롯한 미수교국 자본주의 국가들과 국교정상화가 진행되어 이들 국가의 외교공관이 평양에 설립되고, 북한의 해외공관이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에 설립될 것이다. 또한 북한은 국제경제기구에 가입하여 외자 도입을 추진하면서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전력 질주할 것이다. 북한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마이너스 경제성장에서 탈피,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개발경제 단계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적으로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일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이것은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존속 여부와 관련된다.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할 지의 여부는 중국에게 달려있다. 중국은 북한이 시장경제질서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받아들이면 미국의 영향권아래 들어가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자신들처럼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되, 사회주의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선호한다. 미국으로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북한이 완전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체제로 전환하기보다 중국식 사회주의체제로 전환하는 정도에 만족할 수 있다.

포스트 김정일 이후 새로운 후계체제의 구축과 함께 세대교체가 진행되면 사회 각 분야의 엘리트들은 새로운 정치분위기를 기대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식 개혁·개방을 지향하는 사회주의를 추진하는 한편, 정치적 측면에서는 중국보다는 다원화될 가능성이 많다. 중국은 등소평 이후 순차적으로 개혁·개방을 해왔고, 개혁·개방 이후에는 정치범수

용소와 같은 북한식의 비인도적인 통치를 자제하였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김정일 이후 그동안 억눌렸던 북한주민들의 불만이나 정치적 요구가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북한은 초보적인 다원주의 정치체제나 사회시스템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은 북한체제 전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개혁·개방의 와중에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 한국을 동경하고 한국과의 통일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당국 스스로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개혁·개방 정책의 확산으로 북한경제가 활성화단계에 진입되고 개혁·개방의 성과가 나타나면, 북한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변화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V. 맺음말

작년 9월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3남 김정은을 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결정한 이후 3대세습 구축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중동발 민주화 바람으로 인해 향후 북한에서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머지않아 민주화를 요구하는 피플 파워가 폭발할 가능성에 대한 논의들도 많다는 것은 북한체제가 불안정하다는 이야기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김정은 3대세습의 호전성이다. 국내체제가 불안하면 통치자는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대외강경정책을 전개한다. 북한역시 예외가 아니다. 북한의 경우 항상 내부적으로는 노력 운동 및 대중동원정책, 외부적으로는 군사적 긴장조성을 통해 체제를 유지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과거 김정일이 1960년대 말 후계자로 부상할 때, 무장공비 침투와 같은 대남도발을 자행했던 것처럼 김정은이 3대세습을 정당화하고 주민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군사적 모험주의 정책을 전개할 수 있다. 즉, 대남도발로 안정적 세습체제를 구축

하려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곤경에 처해있는 마당에 한반도에서 새로운 도발을 하기란 힘든 측면도 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북한은 언제든지 도발할 준비가 되어있는 국가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도발을 통해 국가리더십을 발휘하려는 김정은이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을 선도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북한체제는 장기적으로는 개혁·개방 체제로 나아갈 것인데, 그 때의 지도자가 김정은인지의 여부는 불확실하다.